+

시



진 호 림 ㈜리얼프로텍 대표이사

AI는 기술이 아니라 자본과 권력의 새로 운 언어다. 데이터와 전력, 인프라, 냉각수, 그리고 인재를 품은 도시가 미래 산업의 주 도권을 잡는다. 20세기를 석유가 지배했다 면, 미래는 인공지능(AI)이 지배한다. AI 를 선점한 도시는 자본을 끌어들이고, AI 인프라를 확보한 국가는 산업을 통제한다. 지금 세계의 자본은 인공지능을 향해 이동 하고 있다.

정부는 'AI 국가전략'을 내걸고, 지자체 마다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두고 치열한 유 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광주는 2019년 다른 도시들이 도로·철도 같은 SOC 사업을 선 택할 때, 과감하게 AI 산업을 국가균형발 전 예타면제 사업으로 추진했다. '미래는 기술에 있다'는 믿음이 그 출발점이었다. 그렇기에 이번 AI 데이터센터 유치 실패 는 단순한 아쉬움을 넘어, 광주가 스스로의 전략과 실행을 돌아봐야 할 계기로 지적된

초거대 AI 모델인 챗GPT는 일반 검색보 다 10배 이상의 전력을 사용한다. 오픈AI와 글로벌 컨소시엄이 구상하는 'AI 수도'에는 수만 대의 슈퍼컴퓨터가 24시간 쉼 없이 돌아 간다. 그 전력소비량은 웬만한 중소도시 하

AI 광주, 시스템 혁신이 필요하다

나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결국, 안정적 인 전력 공급과 낮은 자연재해 위험, 정치・사 회적 안정성, 빠른 통신망, 그리고 확장 가능 한 부지를 두루 갖춘 도시만이 경쟁력을 가 로가 아니라, 전력망과 데이터 회선이다. 진다.

양성 체계를 내세우며 AI 데이터센터 유치 에 나섰지만, 민간기업 삼성SDS는 해남을 선택했다. 전력 인프라와 냉각수, 부지 확장 성 등 비용 효율성에서 해남이 앞섰기 때문 이다. 광주시의 파격적 제안도 '최소비용·최 대효율'을 중시한 기업의 판단을 바꾸지 못

광주는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라는 배경에 기대며 범시민 서명운동으로 여론몰이에 나 섰다. 첨단산업 유치에 아날로그식 전략을 꺼내 든 셈이다. 협상력과 데이터 기반 논리 가 아닌, 이벤트 중심의 홍보가 앞섰다. 그러 나 "오픈AI의 심장이 해남으로 간다"는 한 줄의 보도가 만들어낸 프레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여론의 주도권마저 해남 에 내줬다.

정치 리더십의 부재는 더 뼈아프다. 전 남의 중진 국회의원들이 중앙 무대를 누비 는 동안 광주의 초·재선 의원들은 존재감 을 잃었다. 정치의 깊이가 얕아지면 행정 의 추진력도 약해진다. 국회의원도 짬밥 순서가 있다는데, 3선 4선의 중진 의원을 키워내지 못한 책임에서 시민도 자유롭지

일부는 해남의 교통 여건을 문제 삼지만, 혁신은 언제나 변두리에서 시작된다. 1950 -60년대 실리콘밸리의 새너제이와 팔로알

토는 과수원과 목장이 이어진 평범한 시골 이었다. 그러나 그 '변두리의 실험'이 세계 기술 문명을 바꿨다. AI 산업의 교통은 도 사람보다 데이터가 더 빠르게 움직이는 산 광주는 5만㎡ 규모의 AI 집적단지와 인재 업에서 접근성보다 확장성이 더 큰 경쟁력 이다.

삼성SDS의 해남 선택은 블랙록이나 오픈 AI 같은 글로벌 투자사에 '이곳이 실제로 작 동 가능한 AI 인프라 허브다'라는 강력한 신 호가 될 수 있다. 광주는 이 흐름을 부정할 것 이 아니라, 오히려 해남의 배후 도시로서 AI 생태계를 함께 구축하는 상생 전략으로 전환 해야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AI 데이터센터 유치 실패를 둘러싼 이해타산이 복잡하게 얽히고 있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책임 공방이 아니라, '무엇을 바꿀 것인가'에 대한 성찰이 다. 선거는 사람을 뽑는 과정이지만, 결국 평 가받아야 할 대상은 행정의 구조와 작동 방 식이다.

객관적 데이터로 판단하고, 일관된 원칙 으로 움직이는 행정이 진짜 힘이다. 권력 교체 때마다 정책이 흔들리고, 조직이 눈치 를 보는 방식으로는 미래를 준비하기 어렵

광주의 과제는 '누가'가 아니라 '무엇을'과 '어떻게'의 문제다. 개인보다 시스템이, 감정 보다 논리가, 정치적 구호보다 데이터가 앞 서는 구조가 필요하다. 통제보다 신뢰, 감시 보다 학습, 그리고 정체보다 혁신이 자리 잡 을 때, 광주는 이번 실패를 딛고 진정한 'AI 중심도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社說

연구·산업 생태계 두루 갖춘 나주에 '인공태양' 구축을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 사업에는 2027년 부터 2036년까지 10년 동안 핵융합 기술 개발 3 천500억원, 실증 인프라 구축 8천500억원 등 총 1 조 2천억원이 투입된다. 나주는 한국에너지공대 와 한전 등 670여 전력기업이 집적해 최적지로 평가받는다. 물론 국가 과학기술 역량 강화와 균 형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전남지역 유치위원회가 출범했다. 대국민 홍 보 및 대정부 건의, 대학·기업·연구기관과 공동 노력, 정부·국회 협력체계 강화 등 종합적인 역 할을 맡는다.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교육·문화· 의료 인프라가 잘 조성된 우수한 정주 여건을 자 랑하고, 지진이나 자연재해의 피해가 없으며, 단단한 화강암 지반과 넓게 확장 가능한 부지를 보유하고 있다. 2020년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준 비 시 안정성도 충분히 검증됐다. 새만금산업단 지를 제안한 전북도 등 타 지역과 비교할 때 경 쟁력에서 한 발 앞서있다.

인공태양 후보지는 제안서, 현장 심사, 발표 평가를 거쳐 11월 중 선정된다. 2021년 타당성 조 사 용역을 시작으로 단계별 전략을 실행해온 전

남도는 2050년까지 200개 이상 기업 유치, 1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 등 막대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를 예상하고 있다. 김영록 지사를 첫 주자로 전 도민의 뜨거운 관심과 염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릴레이 챌린지도 전개하고 있다. 폭넓은 참여, 공감대 확산에 박차를 가하며 모든 역량을 집중 해야한다.

바닷물에서 얻을 수 있는 중수소와 삼중수소 를 연료로 삼아 태양 내부의 에너지 생성 원리를 지구에 구현한 인공지능(AI)시대 전력 엔진이 다. 수소 lg으로 석유 &에 맞먹는 양을 생산할 만큼 효율적이다. 이산화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고 폭발 위험이 없어 탄소중립을 실현할 차세 대 청정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남은 태양광 ·해상풍력 등 무한의 재생에너지도 풍부하고 한 국전력, 에너지공대, 에너지밸리 등 연구·산업 생태계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

전남 나주에 위치해야 한다. 민관이 함께 추진 체계를 수립, 강력한 의지를 모으고 있다. 정치권 도사활을 걸어야 한다. 미래 핵융합 기술의 핵심 거점이 될 것이다. 성공적 유치를 기대한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 광주·전남도 대혁신의 전환점

제33회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 2025 Korea)가 경북 경주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린 가운데, 직전에 타결된 한미 관세협 상 또한 세계적 관심을 모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국빈 방문을 앞두고서도 아직 이르 다는 부정 전망이 나왔으나 이재명 대통령과 강 력한 동맹 관계의 기조 아래 전격 합의에 이른 것이다. 양국은 대미 금융투자 3천500억 달러(약 484조원)를 현금 2천억 달러와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로 명명된 조선업 협력 1천500억 달러 로 구성했으며, 외환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 해 현금의 경우 10년 분할에 원금이 보장되도록 했다. 이에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 하고, 쌀·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분야 추가 개방 은 포함하지 않았다. 상호관세는 지난 7월 말 합 의 이후 이미 15%가 적용되고 있다.

금융투자나 관세협상 모두 일본과 대만 등에 비교해 결코 불리한 게 아니라는 평가 속에 불확 실성이 사라지며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광주·전남 각계에서 트럼프 리스크 해소에 의미 를 부여하는 이유다. 특히 지역 주력산업인 자동 차·부품, 가전 등의 수출 여건을 개선하고 경쟁 본 2025 APEC 회의였다.

력 회복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 대가 크다.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이뤄낸 역사적 타결이다. 국가 안보의 핵심 전력인 핵추진잠수 함 건조에 대한 승인도 얻었다. 꾸준한 인내와 전략의 결실이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 역 강화의 흐름 속에서도 실용외교가 빛났다. 강 기정 시장은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야 당마저 환영하는 성공적인 협상 결과를 얻어냈 다. 자동차의 도시 광주도 새 시대를 헤쳐가야 하는 대한민국호에 힘을 싣겠다"고 했고, 김영 록 지사는 "농업의 추가 개방 압력을 막아낸 것 도큰 성과다. 국익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따지고 끝까지 대안들을 제시하면서 설득한 점이 주효 했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 등 갈수록 기술 패권 경쟁이 격 화되는 추세다. 정부와 지자체는 합리적 정책 마 련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기업들도 지역 산 업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혁신으로 내실을 다져야 한다. 이제 시작이다.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고 수출 기반을 확대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 전 세계가 지켜



이 용 연 한국마을자치연구소 대표 주민자치법제화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

국민주권시대 이재명 정부가 6개월째 접 어들면서 국정운영의 틀을 잡아가고 있다. 내란 사태와 국정 혼란을 수습하고 대미 관 세 협상 등 당면한 과제들을 안정적으로 관 리하면서 나라다운 나라의 회복력을 되살려 가는 중이다. 검찰개혁, 경제안정과 함께 국 민 안전과 민생 회복을 도모하고, 특히 자치 분권의 실질화를 위한 노력도 강화하고 있 다.

지방시대위원회는 혁신자치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10월 24-25일 워크샵을 갖고 5극 3 특 과제와 주민자치 실질화에 대한 전문가, 활동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 11월19일부 터 울산에서 열리는 지방시대 엑스포에서는 전국 주민자치 우수사례 발표회가 3년 만에 다시 부활해 개최된다. 행안부는 오는 11월10 일에 '2025 광주 주민자치·마을공동체 한마 당' 자리에서 '주민자치 실질화 전라권 라운 드테이블'을 개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 정이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

국민주권시대 시민주권형 광주시정 실천

맞춰 각 지방정부들도 주민주권을 강조하고, 주민자치를 강화해 지역의 성장동력을 되살 리려 힘을 모으고 있다.

롯되고 확대된 개념이며, 국민주권은 주민주 권을 통해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주권 형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은 매우 크고 중 요하다. 근대 국민국가 이전에 지방은 역사 적으로 독립적 통치 공간과 자율적 통치 주 체로 발전 돼왔다. 여기에서 중앙 권력 성립 이전의 자연법적 고유권, 전래권, 제도적 권 성을 확인하고 실천하는 바른 길이라고 할 리로서 자치권 사상이 연방적 국민국가 형태 로 유지 돼왔고, 이에 지방의 자치권에 기초 한 주민주권 원리도 확인 돼왔다.

곧 근대 국가의 국민(People)형성 이전 에 일정 수준의 자치권이 보장된 자유도시 의 시민(Citizon)이 실재했다. 국민국가가 지방의 연방·연합체에서 비롯됐고, 국민주 권도 시민주권에 뿌리를 두고 확대됐다. 오 늘날에는 국민주권에 기초한 대의제의 한 계를 보완하는 대안으로 시민의 직접 참여 와 협치 거버넌스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주민자치가 지방자치를 설 명하고 이해하는 방식은 생활공동체로서 마을이 도시로 확장되면서 시민 스스로 자 연법적 고유권리인 시민권으로서 도시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자치조직의 시정부를 구 성하고 '시민자치'를 실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시민주권형 시정은 당사자 시민이 도시 의 문제를 찾아내고, 소소하지만 일상에서 해결하고 실천하는 힘을 만들어 내는 로컬 사실 국민주권은 주민(시민)주권에서 비 민주주의를 성장시키고, 일상의 민주주의 와 시민자치가 국가 의제와 민주주의를 '아 래로부터 재구성하는 길임'을 확인하게 한 다. 이러한 점에서, 국정과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민자치 실질화'는 지방정부 차원의 시민주권의 실천을 넘어 국민주권을 아래 로부터 재구성해 민주공화국으로서의 정체 수 있다.

> 국민주권시대를 맞은 광주시정은 민주인 권도시로서 광주의 정체성을 높이고,살기좋 은 행복한 시민의 도시로서의 삶의 질을 향 상시키는 것이 시민주권의 시대적 정신을 실 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광주시정의 목표 와 발전 전략, 시정 운영의 절차와 과정을 시 민주권시대에 맞게 재구성하고, 시민주권형 광주 시정을 실천하는 추진 T/F를 구성해 정 책과제를 도출하고 시행하길 바란다. 시민주 권형 광주시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을 위해서 는 시와 자치구, 일선 동 간의 권한과 기능을 조정해 시민참여와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자치구의 업무 중 동네방역, 공원관리, 마을 안전 등 주민친화적 업무들은 주민자치회 등 이 직접 처리하도록 공동생산 및 창출의 기 회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雌鹟詩

잠들지 못할 때

송기원

닦아서 날카로워지는 것은 비수만이 아니다 밤은 깊어서, 누리에 가득한 슬픈 눈물이 저마다 무거운 꺼플을 닫을 때 이제 그만 우리도 비수를 거두자 이 밤에 불면으로 빛나는 자여 그대 두 눈의 진주가 나를 닦아서 나 또한 진주가 되어 누군가를 닦는다. (시집 '그대는 언제나 밖에', 살림, 2023)



[시의 눈]

역사책을 펼치면 피비린내 나는 칼과 창의 맞부딪침, 총탄 포탄이 빗발치는 화염의 냄새로 진동한다.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세계사도 그렇고 국사도 그렇고 개인사도 또한 그렇다. 미움과 질시, 분노와 폭력을 품고 각축하며 헐 뜯고 각축하다가 서로가 상처를 입고 지치고 허물리어 깊은 상흔을 핥으며 뒤늦은 후회에 가슴을 치기도 한다. 강자 가 약자를 몰아붙이는 약육강식의 정글을 직시하고 있는 시인은 평화의 언어를 살생의 무기들에게 불어넣기로 한 다. 그는 선지자의 말을 되새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 날이 오면, 사람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 을 만들 것이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을 것이다.' 시인이 선택한 무기는 원융무애의 정신이다. 칼은 더 이상 죽 이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거친 흙을 갈아 생명을 살리는 보습날 같은 도구가 되어야 하니까. 흙더미 위에 빛나는 보습 날은 걸리고 편벽됨이 없이 가득하고 만족하며 완전한 일체가 되어 상호 융합하여 걸림이 되지 않는 참된 자기완성 의 정신을 표방함이 아니겠는가. 비수를 거두어 날카로움을 부드러움으로! 상처를 회복으로! 무애행을 통해 시인은 자신을 통으로 담금질하고 있는 것을. 〈윤삼현·시인〉

< 독자투고

최근 금융사기의 표적이 젊은 층을 노리는 AI 금융사기로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중장 년층이 주요 피해자였지만 이제는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 같은 젊은 세대가 중심이 되고

이른바 'AI 사기 시대'다. 이들의 교묘한 수법으로 진화한 것은 가족의 목소리를 모사 한 인공지능 음성, 유명인의 얼굴을 합성한 영상이 실제처럼 유포되며 피해자를 속이는 수법이다. 과거에는 '음성 사기'였다면 이제 는 '시각과 감정까지 속이는 종합 디지털 범 죄'로 발전한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신종 사 기의 주요 피해자가 금융 이해력이 낮은 청 년층이라는 점이다. 사회 경험이 적고 빠른 수익이나 투자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심리 가 사기범의 주된 표적이 되고 있다.

젊은 층 노리는 'AI 금융사기' 주의보

젊은 세대가 이런 AI 금융사기에 취약 한 이유를 분석해보면 먼저 디지털 기기에 는 익숙하지만, 금융 문해력은 낮은점과 '나도 한 번에 큰돈을 벌어보자'라는 조급 함이 '리딩방'과 '가짜 투자 플랫폼'의 미 끼가 된다는 점이다. 또 사회적 고립과 외 로움을 악용하는 로맨스 스캠이 급증하는 등 신뢰와 감정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는 휴대전화 문자 링크나 투자 제안은 반드 시 출처를 확인하고 '급한 송금' 요청은 가족 본인에게 직접 통화해 보는 습관을 지녀야

한다. 아울러 대학과 기업도 청년 대상 금융 문해력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 폰 사용법을 배우듯 '디지털 금융 방어력' 또 한 필수 생존능력이 된 시대이기 때문이다.

대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단순한 홍보 나 경고를 넘어 AI 탐지 기반의 사기 모니 터링 시스템, 피해 계좌 즉시 지급정지, 피 해금 환급 절차 간소화 같은 실질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본격적으로 AI시대가 도래 한 만큼 SNS·메신저 기반 범죄는 기술과 제도는 반드시 한 몸이 돼야 앞으로 큰 피해 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재복·고흥경찰서 대서파출소장〉

+

※ 독자투고를기다립니다.하고싶은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

사회부 650-2040 T V 본 부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마케팅본부 정치부 650-2030 사 진 650-2080 경제부 650-2050 논 설 650-2006

650-2009

650-2070 경영지원국 650-2011 사 업 본 부 650-2007 축 650-2020 업 무

광고국 650-2016 편집국 650-2017 업무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 가10 (日刊)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